

# “금융위-금감원 엇박자… 사모펀드사태, 게이트 수준 키웠다”

» 1면 ‘사모펀드 사태’서 계속

□ 유동수 “분리된 감독·집행 신속성 떨어져 사태 초래” 지적 은성수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

금융위 역시 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비롯해 신청인의 금융위에 대한 서류제출이 요구되는 업무에 있어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절차”라며 “직접 서류를 접수한 상황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이거나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옵티머스 게이트”라며 “조직범죄 수준이며, 채동욱 당시 옵티머스 고문(전 검찰총장)은 아래명 경기도지사 등을 만나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장했다. 또 “거의 순환출자처럼 옵티머스로 돈이 흘러갔고, 검찰은 민주당에 대한 로비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언제 관련 사실을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에 뉴스를 보고 알게 됐다”고만 답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감독부실 책임

과 맞물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정책 부문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 기능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지적에 “기재부, 금감원과도 관련이 있어 전체적인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한다”며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금융감독의 가장 큰 문제는 감독과 집행이 분리돼 현장에서 적시 반영 못해 신속성 떨어진다”며 “판매 중단 주요 사모펀드 현황과 금융당국의 대처를 시간 대별로 확인해보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뉴딜펀드와 관련해서는 혈세투입 논란이 제기됐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시장자율성을 해치는 관제펀드라는 오명을 벗으려고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서 원금을 보장해 주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조롱섞인 말까지 금융권에서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을 상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입한 자금이 손실날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도 잘못됐을 때 손실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전문학적 국민 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펀드 출시할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고 책임은 다 투자자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해 이 책임의 잘못이 국민세금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관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장에서 관리·관제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말바꾸기 등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해소되지 않는 의문도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공매도 폐지? 유지?… 은성수 “합리적 방안 마련할 것”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 국감서 답변  
개인 공매도는 양날의 칼  
접근성 향상 개선 등 고민  
차입 즉시 신고 방안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가급적 빨리 합리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를 아예 없앨건지 아니면 대형주 중심으로 운영할건지 확실한 생각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흥성 국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20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 시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

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  
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도 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 특히 포괄적 차입을 차입 공매도로 인정하고 행해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 규제는 차입할 때 신고하지 않고 매도가 이뤄진 다음에 신고하다보니 공매도가 차입 공매도인지 무차입 공매도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며 “차입을 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바로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는 당연히 신고가 필요하지만, 다른 용도로 있기 때문에 모든 차입을 신고하는 것은 전산문제 등 불편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사모펀드 투자자산에 표준코드 등 투명시스템 구축

예탁원, 시스템 구축 TF 가동  
자산명세 매칭하고 운용 지시

한국예탁결제원이 제2의 옵티머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전자등록 및 예탁되지 않는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상품코드를 표준화하는 ‘펀드 투자대상 자산 표준코드 관리기준’을 정립하고, ‘펀드자산 잔고대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상호 대사와 견증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예탁결제원은 금융당국·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사무관리회사·채권평가회사 등 40여개의 자산운용업체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TF(Task Force)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지난 8월 첫 번째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예탁결제원은 전담조직인 ‘사모펀드 투명성 강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펀드 전문인력 9명을 투입했다.

예탁결제원은 자산운용사업 인프라인 펀드넷(FundNet)을 기반으로 수탁·사무관리·채권평가·판매회사 등 사모펀드 전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앞서 펀드넷이란 집합투자증권의 설정·환매,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예탁결제 등을 지원하는 표준화 및 자동화된 펀드 전산망 허브를 의미한다. 지난 2004년 예탁결제원이 자산운용산업 관련 후선업무 처리를 일련의 유기적인 과정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축했다. 직·간접 비용을 고려한다면 펀드넷 사용으로 연간 약 687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펀드넷을 통한 사모펀드 제도개선으로 ▲펀드 비시장성자산 표준코드 관리 시스템 구축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추진) ▲펀드자산 잔고대사 지원 시스템 구축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추진) ▲전자계약 통합관리시스템 (2021년 하반기부터 추진) ▲운용지시 지원서비스 (2021년 하반기부터

추진) 등 일련의 과정이 표준화된다.

우선 자산별로 투자자산 코드 부여를 원칙으로 하되, 코드 부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식별번호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 간 자산명세 매칭을 지원하고, 비시장성자산 등에 대한 운용지시가 가능하게 된다.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자산 내 역을 펀드넷의 ‘잔고대사 지원시스템’을 통해 비교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산명세 비교, 자산 실재성 검증, 펀드 운용방식 확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기능이 생기는 셈이다.

또 ‘전자계약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존 투자처와 신탁업자 간 대면으로 체결하던 수기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팩스나 이메일 등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비시장성자산 거래 내역을 펀드넷을 통한 ‘운용지시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표준화 및 자동화도 이루어진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 P2P대출업체 5곳, 자산보다 부채 많아

80곳은 규모 파악 안돼  
자본금 600만원인 곳도

일부 P2P(개인 간)금융기업의 대부업 자회사의 자산 상황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파악조차 안된 P2P기업은 80여곳에 달했다.

12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P2P대출업체 자산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P2P대출업체 233곳 중 5곳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금융권에 편입하는 P2P업체들은 P2P대출 업체를 위해 대부업체를 설립·연계해야 했다. 일부 P2P업체와 연결된 대부업체에서 자본잠식이 일어나 투자자들의 피해가 조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료에 따르면 자본잠식 규모가 제일 큰 업체는 렌딧소셜대부가 -36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프펀딩대부 -27억5800만원, 엔젤크라우드대부 -11억6800만원, 코리아펀딩파이너스 대부 -4억8300만원, 블루문캐피탈소셜

대부 -1억7300만원 순이다.

자본금이 몇 백 만원에 불과한 P2P 회사도 존재했다.

이로움 대부의 자본금은 600만원, 비욘드캐피탈소셜대부 1200만원, 프로펀딩대부 2300만원이었다. P2P업체의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차주의 상환이 지연되거나 폐업할 경우 투자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80개 P2P업체는 금융당국에 업무보고서를 미제출해 자본금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부업체와 설립·연계된 P2P업체의 경우 플랫폼 업체와 대부업체를 동시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P2P업체 렌딧은 지난 8월 증자를 통해 플랫폼 업체의 자본총계는 26억6523만원, 대부회사인 렌딧소셜대부는 2억2740만원을 기록했다.

유의동 의원은 “소액 금융투자자들은 P2P업체의 자본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신중한 투자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나유리 기자